
덴마크·영국 부패방지·고충해소 제도 연구 등을 위한 국외출장 결과 보고

2018. 12.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

❖ 목 차 ❖

I. 출장 개요	1
II. 기관 현황 및 방문 내용	4
1. 덴마크 국제개발청(The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4
2. 덴마크 소비자 옴부즈만(Danish Consumer Ombusman) ...	13
3. 영국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	25
4. 영국 호라이즌 스캐닝 프로그램팀(Horizon Scanning and Futures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34
III. 시사점	45

I. 출장 개요

1. 목적

- 국제개발원조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반부패 정책,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특수 옴부즈만 등 선진 제도의 비교 연구
- 부패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추세와 유럽의 제도적 대응방안, 반부패 노력 등에 대한 연구사례 수집·조사
-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분석, 융합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 미래전략 수립 시 활용하는 빅데이터 분석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2. 출장 기간 및 방문국·기관

- 기 간 : 2018. 11. 18.(일) ~ 11. 25.(일), 6박 8일
- 출장자 : 김영희 민원정보분석과장, 양은경 민원정보분석과 사무관, 장호성 경제제도개선과 사무관, 이준민 제도개선총괄과 사무관
- 출장국가 : 덴마크, 영국

< 국가별 방문기관 및 방문사유 >

연번	방문기관	방문사유
1	덴마크 국제개발청	· 연간 약 159억 달러 규모의 국제개발원조 사업의 담당기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집행을 위해 별도의 반부패팀이 있으며, 부패신고 접수·처리, 평가, 대국민 정보공개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시스템 운영 · 공적개발원조(ODA) 등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
2	덴마크 소비자 옴부즈만	· 2015년 덴마크 국민이 선정한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 1위로 각종 민원처리 기법, 처리실태, 불합리한 규정 개선 사례 등을 연구
3	런던대 반부패연구팀	· 유럽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부패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와 유럽의 대응'이란 주제로 반부패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12~'17.2, 15개 EU국가) · 핵심 연구팀인 런던대를 방문하여 전 세계 국가의 부패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 사례, 공정한 정부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 결과 등 세계 여러 국가의 부패문제와 해결 방안을 효율적으로 조사하여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모색
4	호라이즌 스캐닝 프로그램팀	· 영국 정부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사고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하여('05년), 과학부(GOS) 내 소속된 조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전망 프로젝트 등 수행

3. 세부 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비고
11.18 (일)	인천 코펜하겐		■ 인천 출발(10:50) → 코펜하겐 도착(19:05)	바르샤바 경유
11.19 (월)	코펜하겐	덴마크 국제개발청 (The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 국제개발사업 관련 반부패 제도 현황 ■ 국제개발사업 계약 방식 ■ 사후평가 및 대국민공개 방안 등	Adwan Mostafa Moham
11.20 (화)	코펜하겐	소비자 옴부즈만 (Danish Cosumer Ombudsman)	■ 소비자옴부즈만 제도 현황 ■ 사건처리 절차 및 처리 사례 ■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례 등	Susanne Bager 수석자문관 등
11.21 (수)	코펜하겐 런던	이동	■ 이동(코펜하겐 → 런던) ■ 자료 정리 및 기관방문 준비	
11.22 (목)	런던	런던대학교 (University College London)	■ EU 반부패 연구 프로젝트 성과 등 소개 * 연구주제: 세계·대륙별 관점에서의 부패와 거버넌스의 향상, 공직자와 행정의 책임 등 ■ 국가별 부패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 사례 ■ 청렴도 향상 국가의 반부패 제도 특징 등	Alena Ledeneva 교수 등 (Politics and Society)
11.23 (금)	런던	호라이즌 스캐닝 프로그램 팀 (Horizon Scanning and Futures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 호라이즌 스캐닝 분석 기법 * 데이터 수집 및 활용방식, 이슈 선정, 분석 기법과 모델링, 전문가 활용 및 협력방안 등 ■ 빅데이터 분석결과의 범정부적 공유·적용 프로세스 ■ 다양한 미래전망 프로젝트 사례 등	Charles Featherston 박사 등
11.24 (토)	런던		■ 자료정리 및 귀국 ■ 런던(20:10)	
11.25 (일)	인천		■ 인천 도착(16:05)	

4. 업무수행 내용

연번	직 급	성 명	업무내용
1	서기관	김영희	· 공무국외출장 총괄
2	사무관	양은경	· 기초자료 수집, 방문기관 섭외
3	사무관	장호성	· 기초자료 수집, 출장보고서 작성
4	사무관	이준민	· 기초자료 수집, 출장계획 수립, 공무국외여행 심사 준비 등

5. 기대 효과

- 공적개발원조(ODA) 등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선진국의 반부패 제도를 연구하여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선제적으로 활용
- 국민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기능에 국민 신뢰도가 높은 선진국 옴부즈만의 운영 기법을 접목하여 국민권익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의 개선
- 주요 국가의 부패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과 이를 통한 제도적 개선 노력 등을 연구하여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모색
- 민원예보 등 분석 자료의 활용도 제고, 차세대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축 과정에 선진 기법 등 반영 도모

Ⅱ. 기관 현황 및 방문내용

1

덴마크 국제개발청

(The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1. 방문 개요

- 일 시 : '18. 11. 19.(월) 09:30 ~ 11:30
- 장 소 : 덴마크 코펜하겐 외교부 국제개발청 2층 회의실
DK-1448 Kobenhavn K
- 면담자 : Adwan Mohamad(Head of section Technical Quality Support)
Line Leth(Head of section Controller)
- 연락처 : +45 3392 1533

< 면담자들과 기념촬영 및 면담현장 사진 >



2. 기관 개요 <사전 조사>

□ 목표 및 설립연도

정부차원에서 부패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기관이 외교부 산하 기관인 '덴마크 국제개발청(DANIDA)'이며, 부패 관련 보고 및 부패 개입 문제와 관련된 훈련을 제공하고 국제개발사업의 부패 위험 관리를 수행

- 목표 : 전 세계적으로 빈곤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강화
- 1962년,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국제개발원조 사업의 담당 기관
 - ※ 외교부로부터의 독립적 영역임을 강조하기 위해 자체 기관 로고 사용
- 개발원조 예산 : 약 159억 6천만 달러('16년 기준)
 - ※ 덴마크 GNI의 0.7%에 해당하는 규모로 개발원조 규모 상위 6개국 중 하나

□ 주요 업무

- (지속 가능한 성장) 기업, 투자자 및 시민단체 간의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기업 및 연기금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체계 마련
 - ※ 에너지, 깨끗한 물 제공, 학생 교육 및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환경 제공
- (개발 자금 조달) 다양한 민간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덴마크 세무 당국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세금 징수 및 수입 확보, 투명한 세금 거래 등을 전수
- (컨설팅 및 자금지원) 공공 부문 인프라 구축 관련 컨설팅 및 자금 대출
- 기타 부패방지 관련 업무

□ 반부패 제도 운영

- (부패신고) 자금 부당 집행 등 부패행위에 대해 웹사이트를 통해 별도로 부패신고를 접수. 부패신고는 비밀로 관리되며, Danida 반부패 팀의 관계자만 열람

- 신고가 접수되면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부패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역 경찰의 협조를 받아 자금 환급을 결정(파트너와의 협력 중단)
- (부패예방) 파트너사의 집행 제한, 부패 등 사업의 위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 전개
 - ※ 예) 파트너의 재무관리가 약한 경우 회계시스템을 개선한 후 사업 시작 개발원조 예산의 불법 집행 등 모든 부패행위에 대해 후속조치 실시
- (정보공개) 개발 협력 사업은 종료 이후 평가를 하고 그 결과는 다음 프로젝트에 반영하고 모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 (데이터 베이스)와 결과 등은 별도 사이트를 통해 공개(Openaid.dk)
- 개발정책 심의회 문서는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일반국민에게 공개
- (국민참여)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개발협력 사업의 발전 방안이나 반부패 제도에 대한 국민제안 접수창구 상시 운영

[참고: 외교부 직원 행동강령(Code of Conduct)]

1.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이익과 외교부의 이익 사이의 어떠한 충돌도 피할 것이다.
2.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이다.
3. 우리는 사적 목적을 위해 우리의 공식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을 것이다.
4. 우리는 부당하고 부정직한 이익을 얻기 위해 속임수나 신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5.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재산이나 자금을 잘못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용하지 않을 것이다.
6. 우리는 우리의 기능, 의무의 수행 또는 판단의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선물이나 다른 호의나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주는 것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이것은 관습에 따른 환대나 작은 선물들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7. 우리는 채용, 조달, 원조 전달, 영사 서비스 또는 기타 상황에서의 친구, 가족 또는 다른 긴밀한 개인 채용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8. 우리는 이 행동 강령의 위반에 대한 어떠한 증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보고할 것이다.

3. 면담 주요 내용

우리 위원회 및 방문 동기 설명

대한민국은 적폐 청산, 부패 관행 개선,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청렴도를 나타내는 덴마크의 부패방지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특히 별도의 기구가 아닌 외교부 조직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국제개발청(DANIDA)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부패문제를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싶습니다.

국제개발청의 업무 설명 등 질의에 대한 응답

□ 국제개발청의 반부패팀 조직과 구체적인 업무

- (설립) 국제개발청은 1962년에 설립되어 운영되었으며,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은 2011년임
- (인원) 반부패 업무 담당 인원은 4명
- (주요 업무) 재정집행과 관련된 업무이며, NGO에 지원되는 재정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재정은 1년 단위로 집행되며, 재정이 투입된 부분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 제18차 국제반부패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IACC) 개최를 지원하는 등 반부패 분야 민-관 협업, 관계자간 교류·협력 사업도 추진

* '18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 제19차('20년)는 우리나라 개최 예정

□ 국제개발청의 상급 기관인 외교부의 반부패정책과 행동강령의 특성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 외교부는 국내에서 적용되는 행동강령을 규율
- 법무부는 국제관계에서의 행동강령을 규율하는 측면이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고 있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규율 비교>

공공부문 주요 사례	민간부문 주요 사례
유치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규율	상업분야, 프로그램 분야, 해운산업* 분야 등 * '19년부터 시행 예정

□ 민간부문의 행동강령 제정 방법

- 민간 회사에도 각 행동강령이 있는데, 이는 각 회사에서 해당 법령에 맞춰 스스로 행동강령을 만들게 돼 있음

□ 국제개발청이 외교부 산하기관임에도 부패방지 관련 독립성이 보장되는 이유

-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구성원의 변동이 없기 때문임. 즉,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국외에서 진행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관리·감독 방법

-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관리는 국제개발청에서 하지 않고, 해당 국가 주재 대사관에서 하고 있으며, 대사관이 없는 나라는 인근 대사관에서 관리·감독을 수행
- 예외적인 경우는 다른 기관이 수행하기도 하는데, 가령, 가나와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국제청에서 돈과 관련된 수익사업과 투자 관련 내용에 관여하기도 함
-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국제개발청에서 대사관을 방문하여 점검하거나 대사관에서 본국에 직접 들어와서 사업에 대해 보고토록 함

□ 덴마크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총괄기관 관련

- 사업총괄은 국제개발청이 하며, 대부분의 사업에서 국제개발청과 주재국 대사관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
- 구체적인 사업집행은 사업운영단위별 기관이 수행하는 경우도 존재, 예를 들면 자원관련 사업은 에너지청에서 하고, 아프리카의 경우 국제청이 사업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음

□ 부패신고 및 규정위반 건수

- 부패사례로 신고 되는 건수는 연 160건* 정도이며, 이에는 부패뿐 아니라 예산손실과 관련된 건수도 포함된 것임

* 신고건 중에는 허위신고도 있으며, 모두 부패사례로 판정되는 것은 아님

- 이 중 새로운 사례는 40~50건 정도인데, 새로운 사례란 조달 부문에서 이뤄지는 부당한 계약(가령, 지인을 통한 불공정한 계약), 사업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비용과 관련된 사항임

□ 부패신고 처리절차

- 부패신고는 대사관에서 가장 많이 접수하며, 재원조달 부서에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음
- 처리된 사례의 보고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여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부득이한 경우 비공개하는 사례도 있음
- 이메일로 접수되는 경우는 감사부서와 연계하여 처리하는데, 이 경우는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음

□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관련 부패행위 유형

- 여러 가지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주로 일어나는 유형은 조달품 관련 사례, 문서제작 비용 관련 사례 등 NGO와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음

- 한편,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례로는 지원하는 기관을 방문했더니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 이 사례를 통해 부패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됨

□ 부패행위자 처벌 수위

- 먼저 개인단위 부패행위인지, 운영조직 차원의 부패행위인지를 판단하고
-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해고까지 이뤄질 수 있으며, 제재수준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처리

□ 부패행위자 처벌 절차

-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국제개발청 단독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덴마크 내의 문제일 경우 법무부와 검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처리함
- 외국에서 발생된 사항이면 해당국의 법률 체계에 따라 처리됨

□ 덴마크 정부의 투명성이 높은 이유

- 예산편성현황 등이 외부에 모두 공개되고 있으며, 사업집행과정에 대한 자료도 전부 외부에 공개되고 있음
 - ※ 공개되는 정보는 EU 정보공개법 체계에 따라 개인정보만 제외됨
 - 사업집행 관련해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사관에서 집행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음
- 사업집행에 대한 평가는 외교부 내 독립적인 평가위원회나 개인 컨설턴트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집행 평가 자료도 외부에 공개되고 있음

-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파트너에 대해 필요하면 컨설팅을 해 주기도 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파트너를 선정할 때 엄격한 요건심사를 거침

□ 정보공개 장소(방법)

- ‘Openaid.dk’라는 웹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으며, OECD 정책으로도 모든 보고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Openaid 화면 예시 >



- 또한 UNDP*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UNDP(United Nations Deveiopment Progamme, 국제연합개발계획)은 세계의 개발과 그에 대한 원조를 위한 유엔 총회의 하부조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관리하는 일을 주로 함

□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제안 가능 여부 및 제도화 정도

- 정책이나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 국민 의견수렴절차 등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일반적임
 - 국민 의견이 반영된 대표적 사례로는 2017년에 마련된 ‘국제개발 정책*’을 들 수 있음
- * 국제개발에 대해 4~5년 주기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성격을 가지며, 현재 계획은 이면에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법령은 아님

2

덴마크 소비자 ombudsman (Danish Consumer Ombusman)

1. 방문 개요

- 일 시 : '18. 11. 20.(화) 09:30 ~ 11:30
- 장 소 : 덴마크 코펜하겐 소비자 ombudsman 2층 회의실
Carl Jacobsens Vej 35 DK-2500 Valby
- 면담자 : Carsten Strojær(Special Advisor) 외 1명
- 연락처 : +45 4171 5151

< 면담자들과 기념촬영 및 면담현장 사진 >



2. 기관 개요 <사전 조사>

□ 조직 개요

세계에서 3번째로 옴부즈만을 도입한 나라, 덴마크에는 소비자 옴부즈만 제도가 유명*. 1954년 도입된 소비자 옴부즈만은 강제처분 권한은 없으나 (타협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소비자의 편에서 민간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시장관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수행

* 2015년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기관 1위(2위는 덴마크 의회옴부즈만)

○ 설립연도 : 1975년

○ 옴부즈만 : Christina Toftegaard Nielsen(독임형)

- (임명절차) 산업부장관(The minister for Business and Growth)이 소비자 옴부즈만을 임명

- (임기) 최초 6년 임기이며, 이후 3년까지 연장 가능

※ 9년 임기 이후 다시 옴부즈만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공고 절차를 거쳐야 함

○ 직원 현황 : 사무국은 25명으로 구성(대부분 법률 관련 경력자)

□ 주요 역할 및 기능

○ 수행 역할

- 무역, 기업 및 공공기업이 덴마크 마케팅 실무법(Marketing Practices Act)과 일반적으로 공정한 마케팅 관행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

- 덴마크 지불서비스법, 법률상담법, 전자상거래법, 담배광고 금지법 및 기타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다양한 민법 조항의 준수를 감독

- 특정 불만사항뿐만 아니라 마케팅 활동 및 지불수단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사례를 조사

- 소비자와 거래자 간의 개인적인 분쟁은 해결하지 못하고, 소비자를 대신하여 합의점을 협상할 수 있음

- 특정 또는 보다 일반적인 마케팅 문제에 관한 지침 및 안내 서류를 정기적으로 발행, 거래자들은 계획된 마케팅 활동의 합법성에 관한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관련기관) ① 덴마크 경쟁과 소비자 기관(덴마크 산업, 기업 및 재무부 산하의 정부 기관), ② 유럽 소비자 센터 덴마크(다른 EU 국가에서의 구매에 관한 무료 조언 제공, 덴마크 경쟁 및 소비자 당국과 유럽 위원회의 자금 지원으로 운영), ③ 덴마크 소비자 위원회(정부·의회·공공 당국 및 기업 커뮤니티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독립적인 NGO)

○ 법적 권한

- 소비자들을 대신해 민사 및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경찰에게 업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요청할 수 있음
- 업체에 대한 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긴요한 경우에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음
- 소비자 그룹을 대신하여 집단적인 시정조치(collective redress actions)를 취할 수 있음

○ 불만 제기 가능자

- 덴마크 거주자
- 이 외 덴마크에 거주하지 않는 무역업자와 소비자도 덴마크에서 발생한 잘못된 마케팅 활동을 발견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업메일(SPAM)을 받는 경우 소비자옴부즈만에 불만 제기 가능

○ 조사 우선 고려 요소 : 모든 민원에 대해 유용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지만, 우선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불만의 관련성(예 : 문제의 핵심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며, 이로 인해 많은 불만으로 이어지는 사항)
- 개별 소비자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
- 문제의 보편성(문제가 서로 다른 거래 또는 부문에서 발생하는지의 여부)

3. 면담 주요 내용

우리 위원회 및 방문 동기 설명

국민권익위원회(대한민국 대표 옴부즈만)는 공공분야의 부패와 국민의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옴부즈만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업분야 부패 등 민간영역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의 개입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소비자 옴부즈만 등 분야별 옴부즈만이 발달된 덴마크의 상황이 대한민국에 던지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옴부즈만 사례로서 귀 기관의 전반적인 활동과 성과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싶습니다.

소비자옴부즈만의 업무 설명 등 질의에 대한 응답

□ 소비자옴부즈만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개략적 설명

- 소비자옴부즈만*은 1975년 설립됐으며, 직원은 25명이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
 - * 기관에서 설명한 옴부즈만이라는 말은 북유럽에서 탄생한 말이며, 그 의미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러 가는 사람임
 - ※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은 대리인, 호민관, 행정감찰관 등의 의미로 쓰임
- 마케팅실무법(Marketing Practice Act)에 업무와 기능에 대해 규정돼 있음
- 소비자옴부즈만이 산업부 소속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산업부보다는 법무부와 업무 관련성이 더 많으며, 업무적으로는 어느 기관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
- 소비자옴부즈만은 상품판매, 마케팅 결제시스템, e-커머스, 담배광고 등에 발생하는 문제를 다룸

- 법적 권한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구속력이 있으며, 문제 발생 시 경찰과 동행해서 조사가 가능
 - 법적 조치 이전에 업체 등 분쟁 당사자들 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우선시 함
- 문제 발생 시 경고(warning) → 가이드라인 마련 → 법적인 조치 단계로 진행됨
 - 법적 조치 이전에 업체 등 분쟁 당사자들 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
 -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문제 발생 사안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므로 문제 당사자와 협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음
- 국제적인 소비자 관련 문제는 ICPEN(국제소비자보호 집행기구, 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d Enforcement Network)과 협조하여 처리

□ 협상 전략 및 방법

- 결제시스템, 담배광고, e-커머스, (환경그린 클린) 등 부문별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
- 협상 시 여러 가이드라인안을 미리 제공하고, 각 부문 간 가이드라인에 대해 협상
 - ※ 수많은 소비자 불만을 분석해서 가이드라인안이 만들어짐
 - 가이드라인안을 가지고 1년 가까운 협상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는데, 각 분야의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협상을 진행
 - 가이드라인이 완성될 때는 각 분야의 장(Head)들이 참여하여 최종안을 만들게 됨

□ 소비자옴부즈만의 권한이 강한 배경

- 소비자보호를 위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 이유는, 어느 기관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한정된 인원과 시간·재원으로 문제에 집중해야 함으로 인함

□ 소비자옴부즈만이 개입하는 사건의 성격

- 소비자와의 분쟁이면 개입하고, 단순히 업체 간의 분쟁이면 관여하지 않으며, 국제 문제의 경우 EU법에 따라 해당 국가 당국에 통보하여 처리
- 소비자의 모든 불만을 모두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가치가 있는 것만 처리

□ 소비자옴부즈만이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

- 정부(산업부)에서 임명하는 이유는 법적 지식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하기 때문이며
- 소비자옴부즈만의 주요 위원도 법무부 경력 등 법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정부에서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돼 있음

□ 산업부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음에도 소비자옴부즈만을 산업부에 둔 이유

- 상업하는 사람과 소비자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산업체가 산업 관련 법령에 잘 맞춰서 운영함이 필요
- 산업체와 소비자의 상생이 중요하므로, 둘의 입장이 상충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옴부즈만이 산업체와 소비자를 적절히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함임

□ 검찰이나 경찰과 협조하여 조사(수사)하는 경우의 진행

- 광고(담배 등)나 다른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 경고(warning) → 벌금 →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법정소송)순으로 진행됨

□ 소비자옴부즈만 가이드라인의 보완 주기

- 덴마크에서는 노사합의문을 3년 주기로 갱신하는데, 소비자옴부즈만 관련 '가이드라인'도 그와 비슷한 주기(3~4년)로 수정·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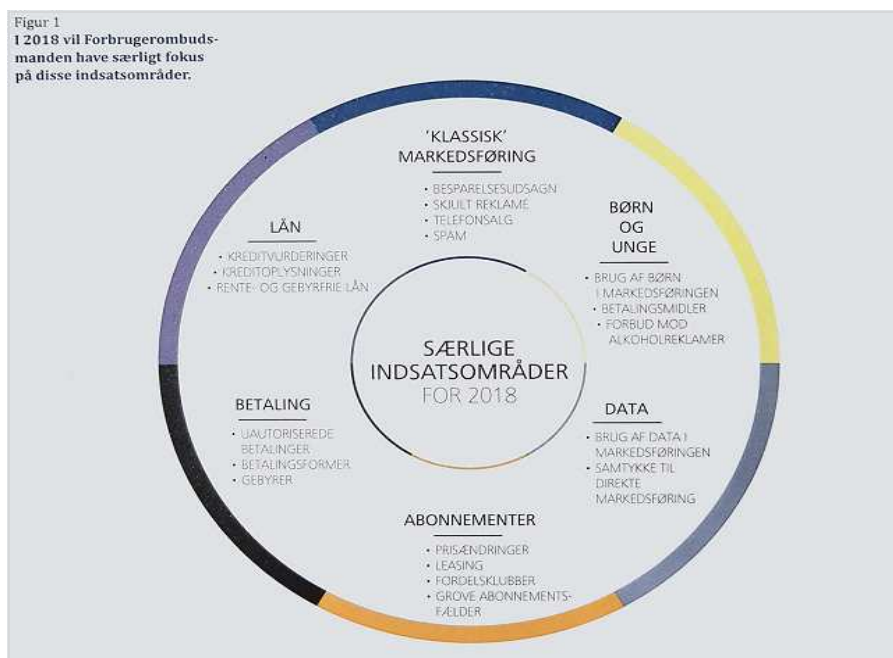
□ 소비자들의 불만제기 형태

- 불만이 집단적이라기보다는 주로 소비자 개별단위로 제기됨
- 하지만 집단적으로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언론에 보도되기도 해서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 불만 처리 시 우선 고려 분야

- 불만의 내용을 유형화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됨
- 가령, 2018년의 경우 전통적 마케팅 분야, 어린이 및 젊은층 분야, 지불 관련 분야 등 6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음

< 소비자옴부즈만 2018년 중점 업무추진 분야 유형 예시 >



□ 다른 소비자 관련 단체와의 역할 차별성

- 덴마크에는 소비자 관련 단체들이 3개가 더 있는데, 소비자협의회는 소비자 보호법을 담당, 소비자의회의 경우 보다 독립적인 역할을 하고, EU소비자센터는 EU와 관련된 소비자 업무를 수행

< 다른 소비자 관련 단체 특성 >

단체명	특성
소비자협의회 (The Danish Competition and Consumer Authority)	정부 산하기관이고 소비자보호법을 만듦
EU소비자센터 (European Consumer Centre Denmark)	EU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업무처리를 하며 결정권한은 없고 자문하는 역할
소비자의회 (The Danish Consumer Council)	독립적인 기관으로 별도의 역할 수행

□ 소비자옴부즈만의 권한 범위(가처분, 기소 권한)

- 주요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가처분도 할 수 있으며, 직접 기소 권도 가지고 있음
- 다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인이 하기 어려운 문제인지 여부, 소비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소비자로부터의 불만 제기가 없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옴부즈만의 직권조사도 가능

□ 우리 위원회(권익위)처럼 제도개선 권고 기능이 있는지 여부

- 우리 위원회와 같이 다른 기관에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개선 권고를 하는 기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다른 정부기관에 법령 개선을 건의할 수 있으며, 그 건의에 따라 실제로 개정된 법이 있음

- 예를 들면, e-커머스법, 소비자보호법 등이 소비자옴부즈만의 건의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소비자옴부즈만은 소비자정책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침

□ 덴마크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꼽힌 이유

- 소비자들의 이익뿐 아니라 결국에는 업체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함
-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소비자 문제를 잘 풀었던 덕분으로 생각함

□ 의회 옴부즈만과의 가장 큰 차이점

- 의회옴부즈만은 보다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 처리하는 데 비해, 소비자옴부즈만은 중대하다기 보다는 국민생활 밀착형 과제를 해결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함

< 소비자옴부즈만과 의회옴부즈만 간단 비교 >

구분	소비자옴부즈만	의회옴부즈만
소속	행정부 내 산업부	의회
업무 성격	국민 생활밀착형 문제	보다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
국민신뢰도	2015년 기준 1위	2015년 기준 2위

[참고: 옴부즈만의 역사 및 덴마크와 스웨덴 옴부즈만의 차이]

1. 제도의 기원

□ 최초 도입국 : 스웨덴(헌법 제27조에 옴부즈만이 명문화됨, 1809년)

- 스웨덴 옴부즈만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행위를 감시하고자 의회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공무원에 대한 기소뿐만 아니라 조사 및 권고 권한까지 보유

* 소속은 의회이나 직무상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됨

< 스웨덴의 옴부즈만 현황 >

스웨덴은 의회 옴부즈만 이외에도 여러 특수 분야에 전문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① 소비자 옴부즈만(The Consumer Ombudsman) : 광고와 계약규정, 소비자 정보, 소비자 교육, 내부재정, 공산품의 안전성, 질과 환경영향 등과 관련한 민원 처리(농림부 소속, 1961년)
- ② 언론옴부즈만: 언론으로부터 개인이 모욕 등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반론의 기회 제공 (신문사협회·출판인협회·국립기자협회·기자클럽 등이 참여, 1969년)
- ③ 장애인 옴부즈만(The Disability Ombudsman): 정부가 선임하는 정부소속의 옴부즈만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기업체 등 사경제 주체까지 관할 범위로 함
- ④ 기회균등옴부즈만(The Equal Opportunities Ombudsman) : 1980년 기회균등법(The Equal Opportunities Act)에 의해 설립되어 노동, 근로환경, 능력발전의 기회, 기타 노동과 관련한 여타의 조건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근로조건을 개선
- ⑤ 민족차별금지옴부즈만(The Ombudsman against Ethnic Discrimination) : 정부에 의해 임명된 정부기관으로 인종, 피부색, 국적이나 민족 또는 신앙으로 인하여 부당하거나 공격적인 취급을 받는 것과 관련한 민원 처리

※ 스웨덴 영토에 편입되어 있다 독립한 핀란드가 1919년 공화국을 선포하고 새로운 헌법에 따라 세계에서 2번째로 옴부즈만 설립

□ 다른 형태의 도입국 : 덴마크(세계에서 3번째, 1954년)

* 1953년 덴마크헌법에 중앙행정기관(군사행정 포함)을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만을 의원이 아닌 자(1~2명)로 의회가 임명하도록 규정

** 1954년 옴부즈만법(Ombudsman Act) 제정 후 법률가 중에서 1명의 옴부즈만 임명

○ 새로운 민주적 통제의 수단으로서의 옴부즈만은 덴마크(1954년)에서 처음으로 실현되어 곧 급격하게 다른 나라(특히 영연방 국가와 서유럽)로 전파됨

- 20세기 후반기에 옴부즈만 기구가 덴마크에서 다른 나라로 퍼져 나갈 당시 공공행정 분야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옴부즈만의 기능도 **행정적 절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강조됨

※ 스웨덴, 핀란드 옴부즈만은 사법부·행정부에 대한 감시·감찰 기능, 고충민원 처리, 직권조사, 권고 등 포괄적

○ 특히 행정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었으나 행정절차가 정립되지 않았던 1970~80년대에 옴부즈만에 의해 채택된 견해는 모범적인 공공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수요와 일치하여 발전됨

- 이에 따라 덴마크 이후의 옴부즈만 설치 국가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지고 있었던 법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소자(prosecutor)로서의 역할은 더 이상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게 되었음**

2. 덴마크 옴부즈만의 특징

- **덴마크 옴부즈만**을 스웨덴, 핀란드와 비교 시 스웨덴·핀란드는 모두 사법부에 대한 기소권한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나 덴마크 옴부즈만은 없음
 - **덴마크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maladministration)에 대한 통제의 범위는 확대되었지만, **권한은 다소 축소되어** 조사, 권고, 의회에 보고만 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게 되었으며, **사법부는 옴부즈만의 통제범위에서 벗어남**

[스웨덴 vs 덴마크 옴부즈만 비교]

스웨덴	덴마크
공무원에 대한 기소 권한 보유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자
법원을 포함한 잘못된 공무에 대한 법적 조치의 기반을 형성	옴부즈만의 보고서는 권고의 성격
관련된 개인에 대한 처벌	행정적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스웨덴 옴부즈만은 정부기관인 반면에 **덴마크 옴부즈만**은 의회가 가진 통제권을 의회가 신뢰하는 제3의 기관으로 넘겨주는 형식이 되면서,
 - 결정권한은 없지만 의회에 부속되어 의회를 대신해 행정부를 통제하는 형태가 되었으며, 도덕적·법적 표준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음

□ 기업윤리 또는 민간정책에 관여 여부

- 기업윤리나 민간정책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이 별도로 있어서 소비자옴부즈만의 주된 기능은 아니지만, 뇌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정부분 관여하게 됨

□ 소비자 불만처리 절차

- 불만처리 절차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처리됨
- 첫 번째 유형으로는 사례를 분석하여 해당 기업에게 불만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해당기업과 대화로써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이며,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름

- 두 번째 유형으로는 광고 등이 잘못된 경우 등 민원 없이 직권으로도 조사할 수 있는 사례로서 해당기업에게 통보하여 개선의 기회를 주는 유형이며
 - 처리기간은 통상 4주로 잡고 있고 법정 처리시한이 정해진 것은 아님
 - 해당 기업에서 스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첫 번째 처리절차로 해결하게 됨
- 세 번째 유형으로는 경미하거나 소비자옴부즈만에서 조사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서 연 처리 건수의 20%(약 1,000건) 정도를 차지
 - 별도 조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약 3주 내에 처리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의 불만을 처리하는 데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

□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관련

- 덴마크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가 큰 관심사항으로 이에 따른 소비자 옴부즈만의 역할이 중요
- 최근에는 블랙프라이데이와 관련하여 허위 가격을 표시하는 등의 이유로 기업에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음
 - ※ 이와 관련, 한국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에 큰 이슈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한국은 큰 이슈는 없다고 답변

1. 방문 개요

- 일 시 : '18. 11. 22.(목) 12:20 ~ 14:00
- 장 소 : 영국 런던 런던대학교 회의실
16 Taviton Street London WC1H0BW
- 면담자 : Alena Ledeneva(Professor of Politics and Society, School of Slavonic and East European Studies)
Diane P. Koenker(Director School of Slavonic and East European Studies), Cosimo Stahl 등 3명
- 연 락 처 : +44 (0)20 7679 8763

< 면담자들과 기념촬영 및 면담현장 사진 >



2. 런던대학교 반부패연구팀 개요 <사전 조사>

(UCL SSEES ANTICORRP: University College London, School of Slavonic and East European Studies ANTICORRP)

□ 런던대학교 개요

- 런던대학교(UCL)은 1826년 설립된 런던 최초의 대학교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보장, 여성의 대학 입학 등을 영국 내에서 처음으로 허용한 종합대학
* 29명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 '18년 세계 대학순위 7위(QS), 영국의 3대 대학
- 72개 학과로 구성(재학생 38,000여명, 교직원 7,000여명 등)되어 있으며 법학, 의학, 유기체 생물학, 예술사학과, **지역학(슬라브 및 동부 유럽 연구학교(SSEES), 1999년 합병)** 등의 학과는 최고 등급의 우수학과로 평가받고 있음

□ EU 반부패 프로젝트

※ 홈페이지 : anticorrrp.eu

- 프로젝트명 : 재검토된 부패 방지 정책 - 글로벌 트렌드와 부패에 대한 유럽의 대응(Anticorruption Policies Revisited - Global Trends and European Responses to the Challenge of Corruption)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일곱 번째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Seventh Framework Program)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은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

- 추진 목적 :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의 개발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을 조사하여 더 나은 부패방지 정책 등 수립

- 추진기간 : 2012년 3월 ~ 2017년 2월

- 참여그룹 : 15개 EU국가에서 20개의 연구 그룹으로 구성

※ 학제간 연구로 인류학, 범죄학, 경제학, 성서 연구, 역사, 법률, 정치학, 공공 정책 및 공공 행정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

- 주요내용

- 부패에 관한 세계적 추세를 확인하고 반부패 정책이 성공적이었으며 어떤 맥락에서 연구되었는지를 제공
- EU 회원국의 정부 품질에 관한 대규모 조사 자료와 전 세계의 부패 경험에 대한 자금 지원 연구 실시

□ 반부패 연구 세부내용

○ 연구방식 : 4개 분야 12개(실질적으로는 11개)의 작업 패키지로 추진

	분야(Pillar)	세부과제(Work Package)	주요 참여자
1	자연, 원인 및 부패의 기제 (Nature, Causes & Mechanisms of Corruption) 부패를 정의하고 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메커니즘을 이해하며 주어진 사회나 정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올바른 통치 체제를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질문. 역사가, 인류학자 또는 정치 과학자가 접근했는지에 관계없이 분야의 모든 작업 패키지의 부패가 종속 변수로 취급됨	1. 부패 이론에 대한 사회, 법률, 인류학 및 정치적 접근(Social, legal, anthropological and political approaches to theory of corruption) 2. 비교 관점에서 부패의 역사(History of corrup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4. 부패 관행에 관한 민족지학 연구(The ethnographic study of corruption practices)	조직 :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리더: Donatella della Porta 교수
2	부패의 인식과 경험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Corruption) 유럽 연합 및 전 세계의 부패 경험 및 인식에 대한 광범위한 원본 데이터를 수집. 이 데이터 및 사례 연구는 책임성 메커니즘 및 관료주의 구조가 부패를 포함하고 정부를 개선 할 수 있는 조건을 분석하는 데 사용	5. 국가별 및 지역 차원에서 정부와 부패의 질에 관한 범 유럽 조사(Pan-European survey on quality of government and corruption at national and regional level) 7. 부패 방지를 위한 개인적 가치와 동기(Individual values and motivations to engage against corruption) 11. 책임성 : 투명성, 공무원 및 행정 응답(Building accountability: transparency, civil service and administrative responses)	조직: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리더: Dr. Monika Bauhr
3	부패의 영향 (Impact of Corruption) 부패와 언론 및 조직범죄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특정 전문직 및 사회단체에 대한 정책 결과의 함의에 중점을 두고 부패의 사회 및 재정비용을 조사	6. 미디어 및 손상(Media and corruption) 9. 조직범죄 및 취약 집단에 대한 영향(Organised crime and impact on vulnerable groups)	조직: University College London 리더 : Alena V. Ledeneva 교수
4	부패에 대한 정책 대응 (Policy Responses to Corruption) 부패에 대한 대응의 개발과 영향을 조사. 정부와 정부 간 관계자의 정책을 분석하고, 부패에 대한 법적인 도구의 채택과 이행 평가 및 영향이나 부족한 점을 설명. 특히 성별의 중요성 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핵심. 또한 전체 사회의 반응 조사(NGO, 풀뿌리 운동, 정치인 및 기업 등)	3. 글로벌 및 대륙 차원의 부패와 지배구조 개선(Corruption and governance improvement in global and continental perspectives) 8. 부패, 원조 및 개발(Corruption, assistance and development) 10. 유럽의 반부패 법안 모니터링 및 시행(Monitoring and enforcing anti-corruption legislation in Europe)	조직 Hertie School of Governance 리더 Alina Mungiu-Pippidi 교수

※ 분야 3을 런던대 SSES*(레데네바 교수 등)가 주도(~'17년 5월까지 활동)

* SSES(슬라브 및 동유럽 연구학교) : 러시아, 발트해 연안, 중부, 동부 및 남동부 유럽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영국 최대의 교육 기관 중 하나

3. 면담 주요 내용

방문 배경 설명

대한민국은 적폐 청산, 부패 관행 개선,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EU 반부패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과 세계의 부패요인과 정책을 학술적으로 연구한 귀 팀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새로운 시사점을 발굴하고 싶습니다.

런던대 반부패팀의 업무 설명 등 질의에 대한 응답

□ 런던대 반부패팀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개략적 설명

- 런던대 반부패팀은 북유럽·동유럽 부패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2004년에 현 건물에 자리를 잡음
 - *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된 해
- 총 65명의 직원이 있으며, 약 1,000명(학부생 700명, 석·박사 과정 300명)의 학생이 연구하고 있음
- 반부패 관련 연구용역사업도 다수 수행하고 있음
- 이 면담자리에 참석한 Hosino 교수의 경우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반부패 문제와 사회적 가치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
- 부패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양태가 다른데, 국가 간 비교·연구실적에 대해 알려주고 싶음
 - 특히,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 현직 대통령이 엄청난 권력과 부패 의혹이 있는데도, 러시아 사회가 그러한 정치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임

- 반부패(Anti Corruption)는 사회과학분야에서 유럽연합(EU)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프로젝트이며
 -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유럽연합 스스로가 부패방지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
 - 또한 반부패 협약 등의 이행이 유럽전역에서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부패의 특성

- 부패는 악의적인 마음이라기보다는 사람 습성(Human nature)의 일부라고 생각
- 오랜 기간의 인연, 서로 알고 지내는 것도 부패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부패를 완전히(100%) 없앨 수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함
- 한국의 경우 부패와 관련해서는 '연줄' 또는 '연고'가 주요한 키워드이며, 아르헨티나는 뒷돈을 주는 것이 부패의 주요한 요인임
-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패와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부패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음

□ 전통적 관점에서의 부패척결 요소

- 과거 전통적인 관점에서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투명성, 책임성, 공개성(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강조되었음
- 잘못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처벌도 전통적 관점에서 주요 요소

□ 현대적 관점에서 반부패를 위한 강조점

- 전통적 관점에서의 반부패 척결 요소에서 지금은 관점이 전환되어야 함
 - 개개인에 대한 죄를 묻고 책임을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 국가나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치인들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나 기준이 어떠한 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
-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가 부패집단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음
 - 과거에는 부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세한 부분보다 큰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부패방지가 잘 안 됐다고 보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는 사회 각각의 계층과 지역별로 부패발생 정책을 달리 해야 함
- 전통적 반부패 강조점이 투명성·책임성·공개성이었다면, **현대**는 **기관별·지역별 등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영국의 부패인식지수('17년 기준 세계 8위)는 나쁘지 않지만, 부유층의 자금세탁, 탈세 이러한 것들이 합법적으로 용인되기도 하듯이
 - 부패는 국가별, 사회계층별로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는 게 현실임
 - 따라서, **상황에 맞춤형 반부패 접근이 현대적 관점에서 중요**
- 최근에는 부패가 국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부패문제에 국제적인 관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해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반부패와 민주주의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도 부패발생이 만연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된 이탈리아*의 경우에 부패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작성한 2017년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에서 미국과 동 순위인 21위를 차지했지만, 2017년 부패인식 지수 순위는 54위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작성한 2017년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는 20위로 좋은 편이었지만, 2017년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51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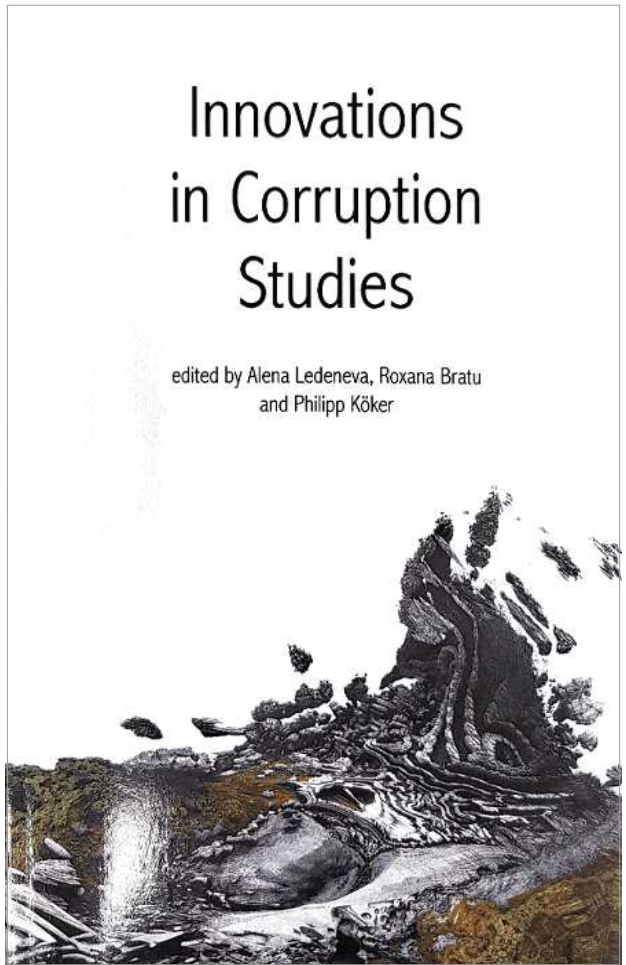
○ 과거부터 부패 연구가 발전하긴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부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임

- 이러한 인식 하에 ‘부패 연구의 혁신*’이라는 책을 다른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발간했음

* 면담 참석자인 Alena Ledeneva 교수가 공동저자이며, 2017년 2월에 나옴

- 부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연구에 대해 깊이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함

< ‘부패연구의 혁신’ 개요 >

다루는 내용	책 표지
■ 현재 부패 연구에서 혁신을 연구하는 주요 이유는 과거로부터 진행된 반부패 개혁이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 ■ 이 책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런던대학 반부패팀에서 개최한 부패 연구 혁신에 대한 세미나 내용을 포함 ■ 주요 내용 - 21세기의 부패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적 접근 - 부패에 대한 재고 - 멕시코, 러시아, 탄자니아의 비공식 거버넌스 등을 통한 비공식적 부패의 시작점 연구 - 공공조달 부패에 대처하기 위해 정치 재정 규정을 사용하는 방법(안) - 비즈니스 부패 관리: 시스템적으로 부패한 환경에서의 비준수 관행 관리 등	

□ 언론과 부패 관련

- 언론에서 부패를 다루는 방식에서 크게 비교되는 두 국가가 있는데
 - 영국의 경우 주로 영국 밖에서의 부패문제를 다루는 데 비해
 - 이탈리아의 경우 자국 내에서의 부패문제에 관심도가 높음
- ※ 참고로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2018년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영국은 40위, 이탈리아는 46위이며, 대한민국은 43위임, 언론자유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였으며, 2위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가 대체로 높았음
- 브라질은 언론에서 부패를 다루는 방식이 한국과 비슷한 경우가 많았는데
 - 예를 들면, 사법당국(검찰)에서 부패에 대한 정보를 흘려주면,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는 경우 등이 있음
 - 반면, 정치권력과 언론이 결탁하는 사례도 있는데, 현재 당선된 브라질 대통령의 경우 언론에서 그에 대한 부패문제를 보도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임
-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부패를 다룰 때는 비유적 표현(metaphor)을 많이 쓰는 것으로 보임
 - 가령, 정치인과 지역의 부패 메커니즘(mechanism)을 다룰 때 시의원이 지역민들을 위해 예산을 따오는 것도 부패로 볼 소지가 있게 함
- 예전에는 부패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데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지만, 현재는 모든 언론이 권력의 부패에 감시자 구실을 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판단됨
 - 부패를 감시하는 역할은 여러 경로를 통해 수행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특히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이 큰 역할을 한다고 봄

□ 제3세계 부패 관련

- 제3세계 부패문제를 바라볼 때, **흑백논리**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시각은 **지양돼야 함**
-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종전에는 처벌위주의 정책을 했지만
 - 그것만으로는 부패방지가 어려우므로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내세우고**, 그것을 통해 부패방지를 도모하고 있음
 - 아프리카의 경우 종교적 가치나 신념을 통해 부패방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부패는 배가 고파서** 발생하기도 하며, **여러 요인에 의해 일어나므로 처벌이 능사는 아님**
- **당근과 채찍(The carrot and stick) 정책을 병행해야** 하고, 사회적·문화적·제도적 관점 등 여러 방면에서 부패의 원인을 연구해야 함

□ 우리나라의 부패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고충해소 또는 부패방지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 고충을 통해서도 부패원인을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함
- 사회적 관습 등에 따라서 부패가 발생하므로, **국가적 슬로건(slogan)을 통해서도 부패방지를 할 수 있음**
 -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주로 다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규범, 민간부패 방지부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을 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
- 기업윤리경영 관련해서는 한국의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과도 일하고 있는데,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부패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공공기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 시장 경쟁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공동노력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부패 증진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민관협력포럼

4

영국 호라이즌 스캐닝 프로그램팀**(Horizon Scanning and Futures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1. 방문 개요**

- 일 시 : '18. 11. 23.(금) 12:00 ~ 14:00
- 장 소 : 영국 호라이즌 스캐닝센터 5층 회의실
1 Victoria Street London SW1H0ET
- 면담자 : Simon Whitfield(Deputy Director,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등 3명(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소속)
Andrew Harding(Senior Associate - Statistician,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 연 락 처 : +44 (0)20 7679 8763

< 면담자들과 기념촬영 및 면담현장 사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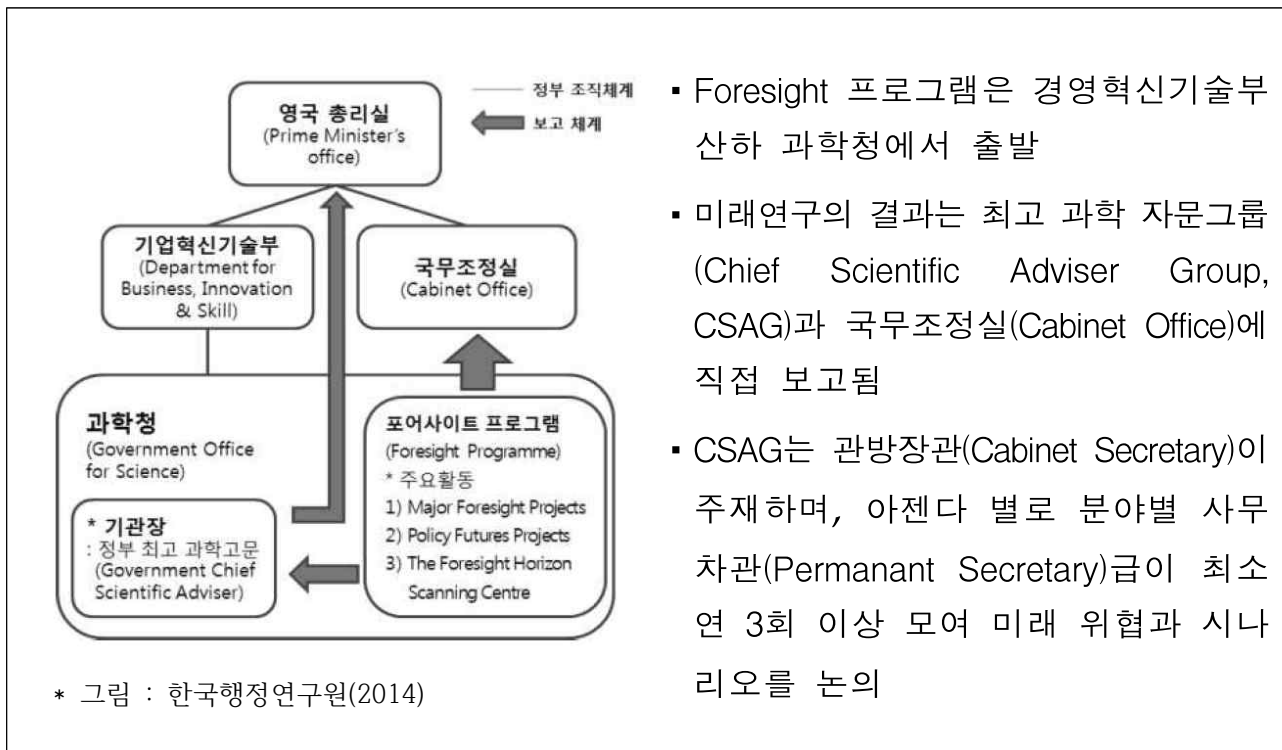


2. 호라이즌 스캐닝 프로그램팀 개요 <사전 조사>

□ 설립 배경

- 영국 내각 소속의 경영혁신기술부(D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에서 영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중장기 미래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Foresight 프로그램” 시작(‘94년~현재)
 - 초기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연구에서 출발(∼’99년), 점차 사회·경제 분야의 트렌드 분석을 접목하기 시작하였고(∼’02년), 이후 범부처 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한 미래연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 ’05년부터는 Foresight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미래예측 및 연구의 본격화를 위해 ‘호라이즌 스캐닝 센터(The Foresight Horizon Scanning Centre)’를 구축·운영

□ 조직체계 및 주요 기능



- 경영혁신기술부(DBIS)는 총리실 소속으로서 영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조적 기업환경 조성, 과학기술과 기술 기반 정부혁신을 주도
 - Foresight 프로그램은 최고 과학 자문그룹(Chief Scientific Adviser Group, CSAG)에 의해 주도되며, 관방장관(Cabinet Secretary)에게 직접 보고되는 범 부처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음
- The Foresight Horizon Scanning Centre(HSC)는 미래예측 및 연구에 대한 전담조직으로, 2014년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내 전략 분석팀과 통합하여 ‘호라이즌 스캐닝 프로그램 팀(Horizon Scanning Programme Team)’으로 명칭 변경
 - 범 부처에 걸쳐 호라이즌스캐닝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머징 이슈를 상위 의사결정자들과 관련 부처/기관에게 전달
 - 이슈 주제별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조정, 커뮤니케이션 지원

□ Foresight 프로그램 세부 내용

① 분야별 호라이즌 스캔 수행 및 공유

- 시그마 스캔(Sigma Scan) 프로그램 : 향후 50년간 동안 영국의 공공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성을 갖는 미래 이슈들과 트렌드를 조사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
- Delta Scan 프로그램 : 250명 이상 정부, 기업, 학계, 통신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래 과학 기술의 이슈와 동향을 개괄적으로 파악
- 팬 클럽(FAN Club: The Futures' Analysis Network Club): 미래 연구와 관련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정기포럼을 분기마다 열고, 그 결과를 뉴스레터 형식으로 제공

< 'The Sigma Scan 2.0' (www.sigmascan.org) >

The screenshot displays the 'The Sigma Scan 2.0' website interface. On the left, a 'Select category' sidebar lists various fields like Economics, Environment, Politics, and Science & Technology, with 'Managing information & knowledge' highlighted. In the center, a 'Search Scan' box contains a search bar and a 'Go' button. To the right, a word cloud features terms such as robots, climate, business, china, and nanotechnology. Below these elements, a 'Search result (16 papers found)' section presents a table of search results.

ID	Headline	Category	Impact	Likelihood	Controversy	Last Updated
541	The Rise of Proactive and Context-Aware Computing	Tech	★★★	★★★	★★★	31/01/2012
535	Tiny Data Servers, Huge Capacities	Tech	★★★	★★★	★★★	31/01/2012
517	Data Mining for Effective Decision Making	Tech	★★★	★★★	★★★	31/01/2012
507	Computing on the Human Platform	Tech	★★★	★★★	★★★	31/01/2012
409	Technology in the Developing World: Spreading Global Democracy or Orwellian Control?	Tech	★★★	★★★	★★★	31/01/2012
301	Technology to Empower the Greying Generation	Tech	★★★	★★★	★★★	31/01/2012
297	Information Management and Handling: Controlling the Rising Flood of Data that Surrounds Us	Tech	★★★	★★★	★★★	31/01/2012
548	From Lone Scientists to Regional Innovation Systems	Tech	★★★	★★★	★★★	18/05/2011
545	New Technologies for Cooperation	Tech	★★★	★★★	★★★	18/05/2011

- * STEEP(정치·경제·사회·환경·기술)별로 6,000개 이상의 문서원본과 300개 이상의 전문가 인터뷰, 250개 이상의 보고서 등의 검색기능 제공('17년 현재는 비공개)

② 미래프로젝트 추진 : 여러 다양한 주제와 이슈들로부터 향후 10~15년 이후 미래를 전망하는 연구프로젝트를 추진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로 시나리오 기법 및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를 적용

영국 'The Foresight Horizon Scanning Centre'의 미래준비프로젝트 사례

[사례①] 영국의 비만대책수립(Tackling Obesities : future choices)

- o 영국인의 비만을 사회를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미래 대응방안 마련
 - 40년간 영국사회의 비만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
 - 2050년까지 남자의 60%, 여자의 50%가 비만이 될 것임을 밝히고, 매년 499억 파운드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영국사회의 비만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밝히고, 정부, 과학, 기업과 시민사회의 공조를 통한 대응방안을 제시

[사례②] 잠재적 위험관리 프로젝트(Future Flooding)

- o 영국을 순식간에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30~100년 이후를 대비한 위험 관리 대책을 마련
 - 해안 침식은 영국 가정과 경제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수백만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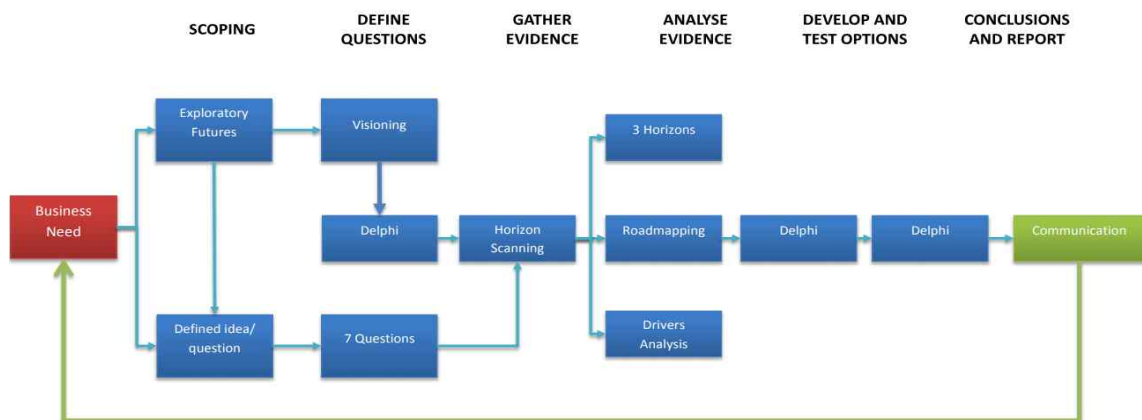
-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해마다 홍수에 대한 피해가 20배씩 증가
- 기후변화, 강의 형태, 생태계의 변화 등 홍수피해를 줄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사례③] 전염병 대응책(Infectious Diseases: Preparing for the future) 마련

- o 글로벌 차원의 동식물 및 인간의 전염병 확산에 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법론과 관점 제시
- USN, 데이터 마이닝, 유전공학, 생물정보학 등을 이용하여 HIV/AIDS, 전염병, 말라리아 등 다양한 전염병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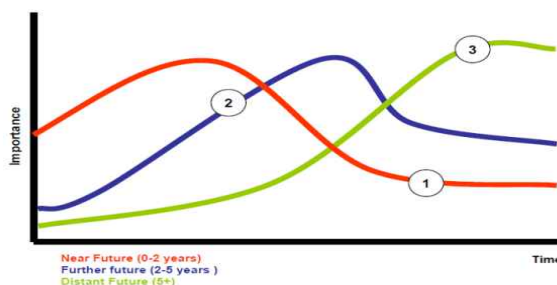
③ 미래연구 방법론 및 기법(Futures Toolkit) : 미래 연구와 관련된 공무원들 대상 교육훈련(Training) 수행

< The Futures Toolkit 체계도 >



- 미래전략도구(Future Toolkit)은 정책 의사결정자와 분석가들에게 중장기 미래에 대한 전략적 사고와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프로세스 도구
- 분야 선정(Scoping)부터 호라이즌스캔, 전문가의견수렴(Delphi) 및 최종 의사결정과정에 분석 기법, 유의사항, 템플릿 등을 제시

- Toolkit 내 3 Horizon 평가법 예시-



- 3 Horizons는 이슈의 중요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각화 도구
- 현재 중요한 이슈, 가까운 미래에 중요한 이슈, 먼 미래에 중요한 이슈로 직관적으로 분류하고 평가에 활용

3. 면담 주요 내용

방문 배경 설명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대표 옴부즈만으로 부패 방지, 국민의 권리 보호, 정부정책과 제도의 개선, 국민과의 대화채널 제공 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이 중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통합 플랫폼(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을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는 플랫폼에 접수된 의견 등을 분석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정책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소셜미디어, 언론보도 내용, 관련 데이터를 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신규시스템을 2019년까지 구축하는 등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지원체계와 미래예측 모델의 개발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에 1990년대부터 이러한 데이터 분석과 미래전략 수립에 관심을 기울여온 영국 정부의 호라이즌 스캐닝 프로그램 팀의 활동과 성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호라이즌 스캐닝 프로그램팀의 업무 설명 등 질의에 대한 응답

□ 기관 현황 및 업무 개요

- 직원 수는 70명, 1년 사업예산은 약 30억 정도이며, 과학부(The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에 소속된 기관
- 호라이즌 스캐닝 프로그램팀은 정책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여 정책기관이나 고위층에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역할 수행
 -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관심 커뮤니티를 만들어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공무원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

-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기 위한 네트워크 개발
- 광범위한 통찰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현재의 사고에 도전함으로써 정부 간 지평선 스캐닝 업무를 개선
- 고위층 인사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고위층의 관심 분야에 대한 임무를 수행
- 기관에서 만드는 보고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래 추세(future trends)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임
- 과학부 소속기관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
 - 독립성의 필요성을 업무실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도 존재

□ 정보수집 대상, 분석기법과 분석자료 활용

- 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처럼 분석정보가 민원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하고 있음
 - 가령, 분야별 통계, 정책부처의 업무자료, 새로운 기술정보 등 여러 자료를 종합 수집하여 분석
- 분석에 사용되는 프로그램(Toolkit)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 다른 기관이나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사용 가능
- 분석된 자료는 소관 정책부처에 정책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책부처에서는 정책수립에 분석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분석 자료가 정책수립에 활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긍정적 피드백을 받고 있음

□ 분석 주제 설정

- 분석 주제를 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됨
 - 첫째는 정책수립이나 개발에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할 때**이며
 - 둘째는 **하나의 이슈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예를 들면 고령화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여러 분야에 관련되기 때문에 '고령화의 미래'라는 보고서가 나오게 된 것임
- 한편, 분석 주제는 통계적·과학적 방법으로 정한다기 보다는 **감성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외부 기관이나 다른 부서의 의뢰에 따라 검토되기도 함
 - 아무튼 분석 주제의 **최종 결정은 과학부 장관이 함**

□ 외부 협력 관계(Networks)

- 기관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는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서 대외적으로 발간되거나 정책기관 등에 제공됨
- 정보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직원이 70명밖에 되지 않으므로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음
 - 학계와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이 형성**되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여러 전문가들과 협업이 진행됨
 - ※ 외부 전문가 및 각 소관 부서의 장 등 내·외부 총 250여 명이 참여하여 협업을 진행한 사례도 있음
 - 외부 전문가들은 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상급 기관인 과학부 장관이 외부 전문가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고, 정책개발에 참여한다는 자부심도 참여 동기로 작용
 - 또 다른 이유는 외부 전문가가 **경력을 쌓는데** 이러한 공적 보고서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에 기인

- 외부 전문가 집단은 각 부처 정책자문 그룹으로 비상임 직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권 교체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외부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 집단임
- 보고서 작성에 자문 등으로 참여할 때도 별도의 자문료는 받지 않는데, 자문료를 받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기사 작위 등을 심사할 때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임
- 국제적 협력은 주로 OECD와 이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상황 등 나라의 처지가 영국과 유사함에 따른 것임

□ 주요 분석 보고서

- 호라이즌 스캐닝 프로그램팀의 보고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긴 하지만
 - 미래 자체를 예측하는 거라기보다는 미래 추세(future trends)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임
- 호라이즌 스캐닝 프로그램팀에서 분석한 주요 사례는, ‘바다의 미래 예측(Foresight Future of the Sea)’, ‘미래의 기술과 평생학습(Future of Skills & Lifelong Learning)’
 - ‘고령화의 미래(Future of an Ageing Population)’ 등이 있음
 - 또한, ‘2030년 법무부(Justice 2030)’ 라는 보고서도 작성

< 주요 분석보고서 예시 >



- 분석된 보고서는 대부분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음
- 앞으로 자동차 관련 분야와 유전자 분야에 대한 미래예측 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임

□ 공무원들의 미래 예측(보고서)에 대한 국민인식 관련

- 영국은 정책 등에 대한 미래 예측을 공무원들이 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임
-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큰 사건들이 예상과 달리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무원들의 미래예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스코틀랜드 독립 등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의 예로 들었음

□ 평등 및 인권분야와 호라이즌 스캐닝 분석 관련

- 영국의 '평등과 인권위원회'에서는 직접 사건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 다른 기관에서 접수한 사건의 내용이나 흐름 등을 파악해서 사건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 직접적 조사나 수사 권한은 없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넘겨줄(이첩) 수 있음
- 영국의 '평등과 인권위원회'에서도 호라이즌 스캐닝 관련 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있음
 - 이 분석 기법은 평등과 인권에 대한 실태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정책개발과 정책수립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호라이즌 스캐닝 프로그램팀에서 하는 방식과는 달리 과거의 자료를 주로 분석

○ 보고서는 다양한 루트로 150여 개의 자료 조사 등을 통해 분기별로 나오고 있음

※ 가령, 아래의 보고서는 국가로서 평등과 인권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 내용으로, 교육·직업·생활수준, 건강, 정의와 안전, 사회 참여 등 모든 생활영역 등에 다루고 있음

< 평등과 인권위 보고서 예시 >



Ⅲ. 시사점

□ 기관의 안정적 운영은 기관의 신뢰성에 긍정적 영향

- 방문국 공공기관 3곳*의 공통점은 기관이 정권교체에 따라 기관장 교체 및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임

* 덴마크 국제개발청, 덴마크 소비자옴부즈만, 영국 호라이즌 스캐닝 프로그램팀

- 특히, 덴마크 소비자옴부즈만은 기관장인 옴부즈만의 임기가 6년이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기관장의 임기를 강하게 보장

※ 최장 9년의 임기 후에도 공개 공고 후에는 다시 임명될 수도 있음

□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 시 공개성 강화는 여전히 필요

- 예산 낭비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공개를 강화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필수적으로 적용

- 덴마크 국제개발청에서는 민간단체(NGO)의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예산은 물론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보고서, 사업평가 보고서까지 모두 공개

□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추진의 중요성 확인

- 덴마크 소비자옴부즈만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만이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임

- '18년에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과제를 중점 추진했듯이 '19년에도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제 발굴과 개선이 필요

※ '18년 상반기에만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과제 50건을 권고했으며, 하반기에도 6개 분야에서 수십 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권고

□ 새로운 부패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향후 반부패의 과제

- 전통적 반부패 전략은 책임성·투명성·공개 강화 등이었다면, 현대의 반부패 전략은 새롭게 나타나는 부패의 양태나 부패발생 원인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전략이 필요
- 즉, 최근에는 과거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부패가 발생하므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부패방지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의미

□ 민원분석 시 협업 활성화 및 외부 전문가 참여 검토

- 새로운 정책 시사점(Insight) 발굴을 위해 민원 분석과정에서 외부 데이터 융합·연계,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협업방안을 모색
 -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호라이즌 스캐닝 프로그램팀의 미래 예측 보고서처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 '12년까지 분기별 빈발민원 분석주제 선정에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침

□ 수집 자료의 활용방안 강구

- 국외출장에서 수집한 자료 중 활용 가치가 있는 자료는 번역을 통해 위원회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 런던대학 반부패팀에서 제공받은 '부패연구의 혁신'은 앞으로의 부패연구 방안 등에 관한 책으로 번역 및 활용 검토 필요

< 주요 수집 자료 >

연번	제공 기관	자료명
1	덴마크 소비자옴부즈만	2017 소비자옴부즈만 연보
2	영국 런던대학 반부패팀	부패연구의 혁신
3	호라이즌 스캐닝 프로그램팀	호라이즌 스캐닝 매뉴얼
4	호라이즌 스캐닝 프로그램팀 (평등과 인권위원회)	영국은 공정한가?